

‘물관리업무’ 일원화 논란 재연

수자원 관리의 일원화 문제가 다시 제기돼 수질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와 수량을 관리하는 건교통부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환경부로 물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데 합의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하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의 수자원심의관실과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이 곧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현재 물관련 업무중 수량관리는 건교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5대강 홍수통제소 등이 맡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 4대강 환경관리청, 3개 지방환경관리청, 4대강 수질검사소에서 관장해 이원화돼 있다.

환경부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적정수질을 유지할 수 없고 적정수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량은 무가치한 수자원에 불과하다”면서 “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로 특히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물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4년 5월 상하수도 관리업무는 건교부에서, 먹는물 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며 현재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서 물관리 업무를 통합관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총괄적인 수자원관리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지난해 8월 범 정부부처적으로 수립된 물관리종합대책은 현행처럼 물관리를 분담토록 결정해 놓았다”며 “물관리의 일원화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당 차원에서 논의됐

는지는 모르나 정부측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 공단, 주택개발 등 국토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가 이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물 개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마땅한 일”이라며 “환경부의 수질 개선은 규제행정이므로 개발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서도 현행처럼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거 문민정부 때도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놓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를 벌였으나 무산됐었다.

G7 환경연구예산 93억원 낭비

환경부가 선도기술 개발사업(G7)을 추진하면서 과제 중복 선정, 연구비 유용 등으로 93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0월 22일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이 환경부의 국감자료 중 국립환경연구원의 G7관련 연구비 정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G7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제의 중복선정으로 58억3천1백만원, 연구비 유용으로 34억4천만원 등 모두 92억7천1백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중복 과제 선정으로 인한 연구비 낭비사례는 ‘슬라이드 스트림을 이용한 질소, 인 제거 프로세스 개발’(연구시행자: 품림산업, 연구비 25억6천만원), ‘하수처리장의 영양소 제거공정 개발’(대우건설 기술연구소, 14억6천1백만원), ‘농어촌형 오폐수 탈질소, 탈인 장치 개발’(과학기술연구원, 9억1천7백만원) 등 5건이 꼽혔다.

연구비 유용사례로는 ▲같은 날 해외, 국내 출

권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당초안의 2배인 1당 1백원이상 물게 돼 '1급수의 맑은물' 보장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가구당 매월 2천원씩 추가부담만 안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팔당수계를 전담할 차관급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팔당호 준설도 적극 검토하자는데는 큰 이견 없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광경호 수질보전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이같은 합의를 도출해냈다"면서 "환경부로서는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차량매연이 대기오염의 50.3% 차지

자동차에서 배출한 가스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내의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4백36만5천t으로 96년의 4백42만5천t보다 1.4%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난방, 산업, 발전, 수송부문 순으로 배출됐던 대기오염물질량이 90년부터 수송부문 비율이 점차 높아진 가운데 작년엔 전체 배출량의 50.3%에 달했다.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은 차량의 증가로 지난 94년 2백15만2천t(전체의 47.5%), 96년 2백15만5천t(48.7%)에서 97년 2백19만4천t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운데 산업부문의 비율은 26.9%, 발전은 17.1%, 난방부문은 5.7%를 차지했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저공해 연료의 보급 확대로

아황산가스는 96년보다 9.6% 감소했으나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탄화수소는 5.2%, 일산화탄소는 3.7%, 먼지는 3.5%, 질소산화물은 1.6%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60만9천t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 전남, 경북, 충남, 서울 순이었다. 서울, 경기도는 주로 수송부문, 전남, 경북은 산업부문 배출량이 많고 경남과 충남의 경우 하동, 삼천포, 태안화력발전소의 증설로 발전부문이 배출량 증가세를 주도했다.

내년에 전국 대기오염지도 만든다

대기환경을 개선하면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토 상공을 2만5천개로 등분한 대기오염 지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작성된다.

환경부는 내년 1년간 시·공간적 대기오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2×2km 격자로 나눈 상공의 오염 배출량을 월별, 계절별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월 10일 밝혔다.

전국토 면적 10만여km²를 4km²씩 나눌 경우 2만5천개의 격자망이 구성된다.

환경부는 전국 대기오염 지도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용역사업에는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기상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이들 연구기관은 우선 인구, 주택현황, 에너지 사용량, 차량통행량과 주행속도, 대기오염도 측정자료 등을 취합한뒤 2만5천개 격자별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 휘발

